



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'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'에서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.

/뉴스

'뉴:홈' 6만1000호 공급... 도약계좌 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

청년정책 살펴보니

이달 중 청약제도 등 대규모 개편 학비·교통비 등 실질적 혜택 강화

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일 경기 광명에서 연 '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: 열일곱 번째,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'에서 발표한 청년정책은 ▲공공분양·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주거 부담 완화 ▲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▲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취업 지원 ▲학비·교통비 지원을 늘리는 등 생활비 부담 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.

우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 등의 형태로 청년층에게 '뉴:홈'을 6만1000호 공급한다.

'뉴:홈'은 기존의 '공공분양주택'으로 나눔·선택형 분양, 청년특공, 획기적 전용 모기지 형태로 청년과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해 새로 단장했다. 뉴:홈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고 싼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%를 40년 동안 모기지로 나눠낼 수 있다.

이와 함께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우수 입지를 선정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1000호도 올해 추가로 공급한다. 역세권, 도심 등에 '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'을 올해 1000호 공급하기

청년정책 추진계획

빈틈없는 취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취업준비 선제 지원: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, 일경험 기회 확대 2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: 서비스산업, 해외취업 등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 지원 3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: 공적 채용 기반 마련, 일·생활 균형 지원
체계적인 자산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: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개선 2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: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, 경제·금융 교육 확대 3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: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·창업 지원 정책 연계
청년생활 걱정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주거 부담 완화: 청년 공공분양·임대 공급,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 2 생활비 부담 완화: 장학금 확대, 교통비·문화비·여가비 지원 3 청년 건강·안전 지원: 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, 청년 해외 안전 강화 4 청년 결혼·출산 부담 경감: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, 결혼 메리트 확대
청년정책 기반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: 위원회, 청년보좌역 등 참여 확대·내실화 2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: 중앙·거점 청년지원센터, 온라인 통합 플랫폼

자료/국무조정실

위해 추가 공모도 진행한다.

정부 관계자는 "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'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'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.2%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"면서 "신생아 특례대출'을 통해 출산 2년내 무주택가구에 1.6~3.3%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. 특히 신생아 1명당 금리를 0.2%p씩 우대할 방침"이라고 설명했다.

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과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한다.

가입이 가능한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

180%이하에서 250%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린다.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의 60% 수준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한다. 혼인이나 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. 소득이 없어 육아후직급여(수당)를 받고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.

'진로·역량개발→취업→재직' 취업 단계별로 빈틈없이 지원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도 대폭 늘린다.

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생 15만명 등에게 고용 지원

서비스를 제공한다. 군 장병들을 위한 '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'도 지난해 8곳에서 올해는 11곳으로 늘려 병역(사회복무요원도 포함)과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▲민간 4만8000명 ▲공공기관 2만2000명 ▲중앙부처 5000명 ▲해외 5700명 ▲분야별 특화(2만5000명)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.

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493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는 1인당 연 3회까지 50% 지원한다.

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는 최대 200만원(취업 3개월 후 100만원, 6개월 후 100만원)의 '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'을 준다.

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최대 1200만원(청년 1인당 월 60만원×12개월+2년 근속시 480만원)까지 지원한다.

지난해 2100명 수준이었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구과제인 'K-Move 스킴' 참여 청년을 올해엔 3100명까지 늘려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.

생활비 등 청년들의 일상적인 비용 부담도 줄인다.

대학생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올해엔 1~3구간 50만원, 4~6

구간 30만원씩 단가를 인상한다. 근로장학금도 지원인원을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14만명까지 늘리고, 근로장학생 지원단가(교내 9860원, 교외 1만2220원)도 올린다.

타지역 청년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거주지역의 공공·문화시설이나 숙박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. 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청년에게는 지출 금액의 최대 30%를 돌려주는 전국 'K-패스'를 도입한다.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'청년문화예술패스'를 통해 문화생활도 돕기도 했다.

정부 관계자는 "청년 맞벌이 부부가 청약이나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제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"이라며 "▲공공분양 특별공급시 맞벌이 소득기준 현실화(월소득 140→200%) ▲결혼전 배우자 주택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▲부부 모두 당첨시, 선택주는 유효처리→동일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신청 가능 ▲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%를 합산해 점수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"고 설명했다.

/김승호 기자 bada@metroseoul.co.kr



고용·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마감

3월

15일

근로자 10명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total.comwel.or.kr)로 제출해야 합니다.

건설업 고용·산재보험 자진신고 및 납부마감

4월

1일

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total.comwel.or.kr)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, 보험료 납부도 즉시 가능합니다.

2024년 전자신고 경품행사

행사기간 보수총액신고: 24.2.1.(목)-24.3.15.(금) | 보험료신고: 24.2.1.(목)-24.4.1.(월)

경품 커피 기프트콘(1200명)

문의 근로복지공단

☎ 1588-0075